

중기부, 지방 원도심 ‘청년·창업가·문화예술인’으로 채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국토부·문체부와 내년부터 추진
지역당 최대 365억 사업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을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로 채운다.

중기부는 국토부, 문체부와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내년에서 새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허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축’ 권역별 1~2곳 내외로 우선 선정해 내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후엔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해 지속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현행 도시·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을 지원하고,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조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또는 장기간 임대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해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허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조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 대표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중기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202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한다.

아울러 ‘창업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선정지역(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한 개의 가계가 상권을 바꾸며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전기차 충전기, 이용수요 맞춘 배치 중요

전국 충전 인프라 54만1567기 집계
대수 확대보다 실제 이용률 높여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국내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54만기를 넘어선 가운데 충전산업의 과제로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에서 실제 이용률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충전기를 배치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54만1567기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GS차지비가 8만8242기로 가장 많았고 파워큐브 6만9932기, 에버온 5만5097기, 플러그링크 5만1198기, LG유플러스볼트업 4만3237기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보유한 충전기는 30만7706기로 전체의 56.8%에 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충전기는 9525기, 한국전력공사는 1만825기다.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채비 충전기 사진.
/채비

주체 기준으로 국내 충전 인프라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조다.

출력별로는 50킬로와트(kW) 미만 충전기가 대부분이다. 30kW 미만 48만2298기와 30kW 이상~50kW 미만 2172기를 합하면 48만4470기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반면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는 1만2681기로 2.3% 수준이다.

다만 저출력 충전기 비중이 높다는 것

만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나 업무시설처럼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는 곳에서는 완속충전기가 이용 형태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심 충전 거점처럼 짧은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급속·초급속 충전기의 필요성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충전요금을 출력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했다. 30kW 미만은 킬로와트시(kWh)당 295원인 반면 200kW 이상은 393.1원으로 책정됐다. 고출력 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요급에 반영한 것이다. 개편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민간 충전기에 적용된다.

충전기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는 설치 대수 확대보다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운영 효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용 수요와 체류시간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충전기를 배치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승혁 기자 sh95@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8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 단국대서 ‘모두의 창업’ 알려

1라운드 선발 규모 1만명으로… 2배 ↑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단국대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열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붐 추가 조성에 나섰다.

이날 캠퍼스 투어는 대학 내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내용과 참여 기회를 알리고 먼저 도전을 시작한 1차 도전자들의 경험을 예비 창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창업 플랫폼이다. 지난 1차에는 약 6만3000명이 참여했으며, 아이디어 심사와 멘토링 등을 거쳐 1100명의 도전자가 2라운드에 진출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창업 도전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라운드 선발규모를 1차 대비 2배인 1만 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전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이어가면서 청년들에게 창업 도전 기회를 알리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이소영 “자영업자의 지속 불가능 비용구조 개선 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공공배달앱 지원 개선 시사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8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직후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는 중국 유통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 충격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산발적 지원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자는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



영업자가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건 자영업자 비용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다. 고금리, 고물가는 물론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도 예컨대 주문비 2만원 중 6000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의 총 경영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배달앱은 두가지 정책 방향으로 접근돼왔다. 민간 배달앱 기업과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방안과 공공 배

달앱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이 중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낮은 수수료의 배달앱 육성 방안에 대해 언젠가 의견을 밝히겠다”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누락 논란에 대해 오해 해소를 위해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HMM-발레, 4.7조 규모 장기운송 계약

계약기간, 2030년부터 선박당 25년

HMM이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발레(Vale)와 4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벌크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HMM은 발레와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30년부터 선박당 25년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과 9월 발레와 체결한 총 1조665억원 규모의 10년 장기운송계약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수주다.

HMM은 계약수행을 위해 지난 6월 발주한 뉴캐슬스틸급 벌크선 8척을 투입한다. 선박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되며 메탄올·에탄올·중유를 사용할 수 있는 3종 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다. 향후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추진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풍력 보조추진장치인 로터 세일도 적용한다.

HMM은 최근 단기 용선 비중을 줄이고 대형 화주와의 장기계약을 확대하며 벌크사업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벌크부문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약 2400억원을 기록했다.

선대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44척이던 벌크선대는 올해 상반기 61척으로 늘었다. 기존 드라이벌크와 탱커뿐 아니라 가스선, 자동차운반선(PCTC), 다목적선(MPV) 등으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이승혁 기자